

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

2021. 12. 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서비스 생산성 결정요인 및 대응방향 ..	2
III. 서비스 인프라 부문별 현주소	3
IV. 추진전략	5
V. 분야별 세부과제	6
1. 서비스 R&D 활성화	6
2.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체계 마련 촉진 ...	11
3. 서비스 통계인프라 고도화	14
4. 서비스 핵심 인력양성	17
VI. 향후 추진계획	21

I. 추진배경

◇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하위권 + 제조업의 절반 수준
→ 뒤집어 생각하면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

□ 주요국은 경제가 성숙되면서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'경제의 서비스화'가 진행

○ 탈산업화, 국제분업구조 확산, 인구고령화,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경제의 서비스화를 견인 중이며,

▪ 특히, 빅데이터·AI 등 신기술의 발달은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

○ 주요국과 격차가 있기는 하나, 우리나라도 그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여 서비스 경제 확대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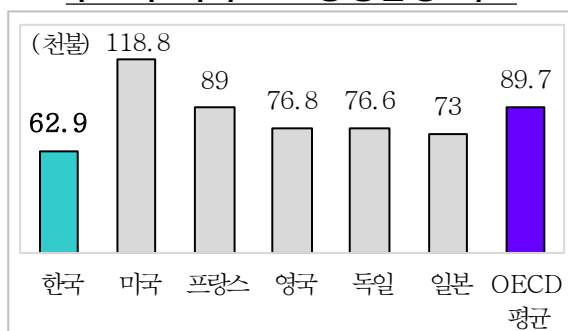
* 부가가치 비중(% '18년) : (韓) 62.4 ('19년), (美) 79.8, (日) 69.6, (獨) 68.7, (英) 79.7
고용 비중(% '18년) : (韓) 70.8 ('19년), (美) 79.9, (日) 72.8, (獨) 74.5, (英) 82.5

□ 다만,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크게 낮은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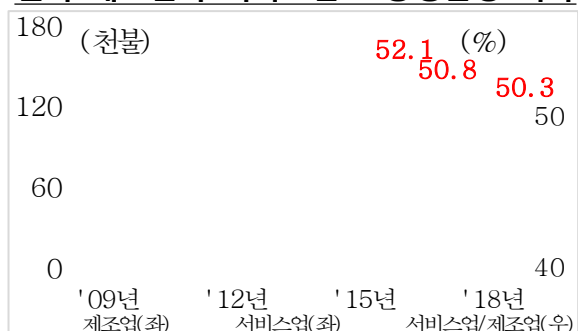
○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.3만불('18년)로, OECD 평균(8.97만불)의 70.1%이며 OECD 33개국 중 28위

○ 또한, 제조업과 비교할 때 50.3% 수준으로, OECD 33개국 중 아일랜드(20.0%)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차이

주요국 서비스 노동생산성 비교



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격차



○ 경제의 서비스화로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의 양적 성장이 예상
→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직결

*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
성장률 1%p 이상 증가 + 일자리 15만개 추가창출 효과(KDI, '19)

⇒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(寶庫)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

II. 서비스산업 생산성 결정요인 및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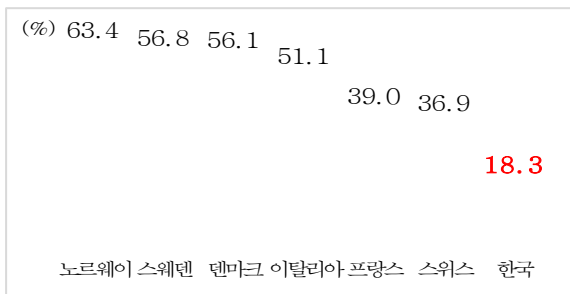
* 서비스 노동생산성 =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/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

- **[공급측 요인]** 새로운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모델 개발,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등 서비스 기업의 혁신은 부가가치 상승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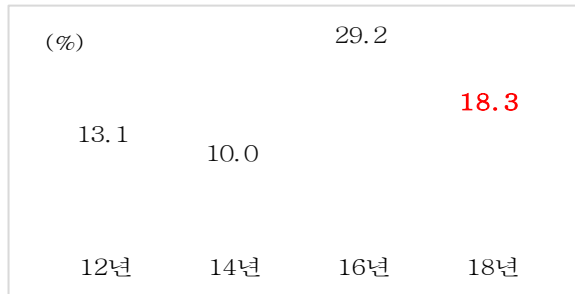
- (평가)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기업 비중*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, 최근 혁신활동도 낮아진 상황

* 전체 기업대비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 비중(한국기업혁신조사, STEPI)

주요국 혁신활동기업(서비스업, '18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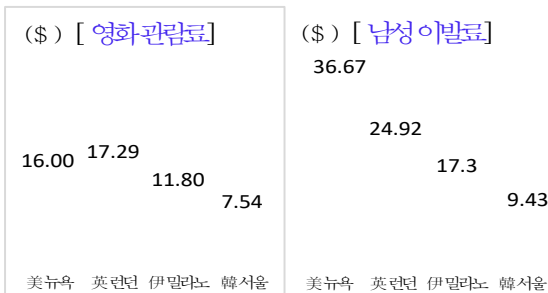
한국의 혁신활동기업(서비스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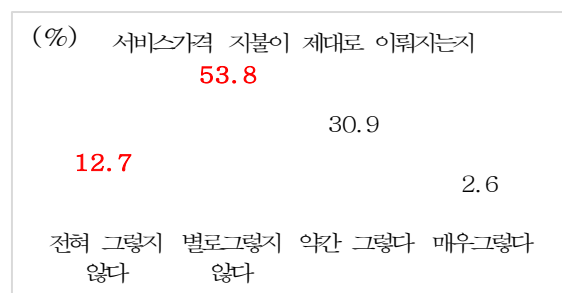
- **[수요측 요인]**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규모, 소득 수준, 서비스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도 서비스 부가가치에 영향

- (평가)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나,
 - 주요국 대비 서비스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, 소비자 인식 등으로 인해 서비스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

국가별 주요 서비스 가격('18년)



서비스에 대한 인식(KDI, '16년)



- **[정책적 요인]** 규제·보조금 등 정부정책도 서비스 생산성에 영향

- (평가) '01년 이후 20여 차례의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여 중점 육성 중이나,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 정책 마련이 필요

⇒ (대응)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**'인프라 고도화'** 추진

- ① 서비스 혁신 기반 확실한 고부가가치화 → 서비스 R&D 활성화
- ② 질적 향상을 통한 서비스 인식개선 → 표준화 및 인증체계 마련 촉진
- ③ 보다 정확한 분석·체계적 이해 기반 정책수립 → 통계인프라 고도화

Ⅲ. 서비스 인프라 부문별 현 주소

1 서비스 R&D

- 서비스 R&D 투자는 혁신 기반 新서비스 창출 등을 통해 부가가치 상승*을 촉진하는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나, 여전히 부족

* 서비스 R&D 1%p 증가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0.14~0.19%p 증가(한경연 '17.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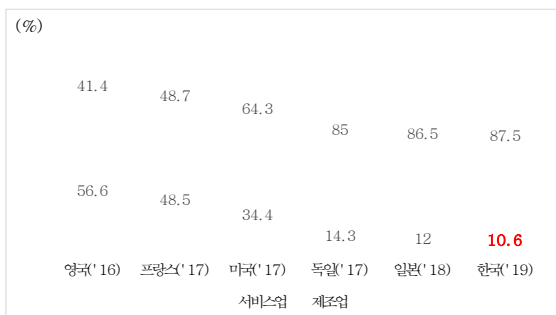
- 민간 R&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10.6%로('19), 美·英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고, 제조업 중심인 日·獨과 비교해도 부족*

* 민간 R&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(%): 영국(56.6, '16년), 프랑스(48.5, '17년), 미국(34.4, '17년), 독일(14.3, '17년), 일본(12.0, '18년), 한국(10.6, '19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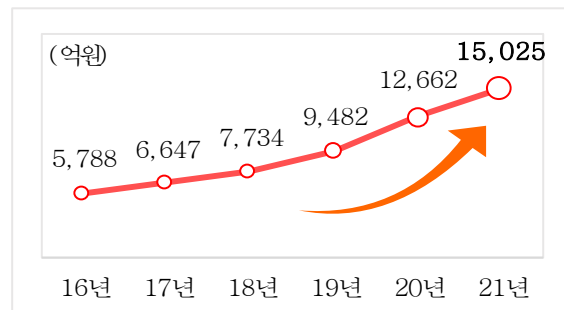
**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이 수행한 R&D 투자만 포함

- 정부 서비스 R&D 투자도 증가 중('16년 0.58조원→'21년, 1.50조원)이나, 전체 정부R&D 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('21년 5.5%)

민간 R&D 투자중 서비스업 R&D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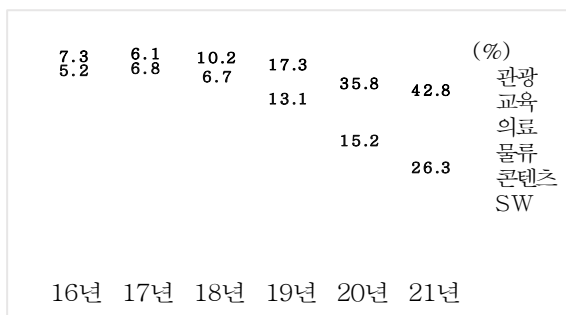


정부 서비스 R&D 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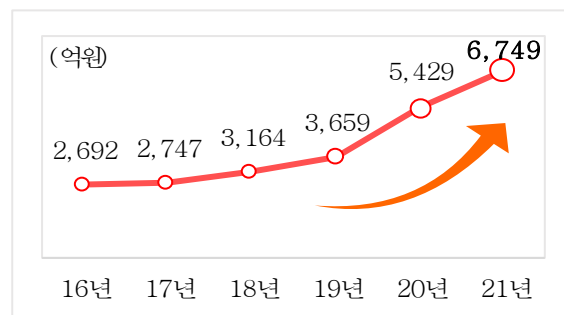


- 다만, SW·콘텐츠에 집중되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정부 R&D 투자는 의료·물류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집중도 완화

유망 서비스 정부 R&D 투자 비중



유망 서비스 정부 R&D 투자 규모



⇒ 민간·정부의 R&D투자 지속 확대 + 전략투자로 R&D 효율성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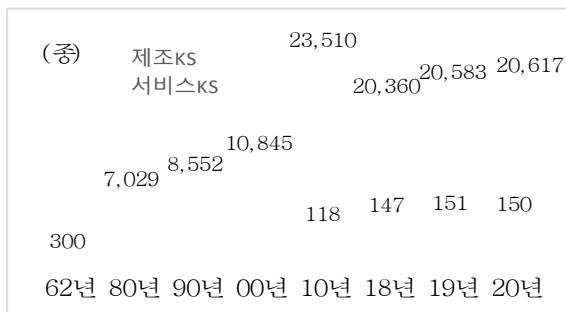
2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체계

- '01년 서비스 KS표준 개발, '08년 서비스 KS인증 도입 이후 서비스 표준화*를 지속 추진해왔으나, 여전히 제조업 대비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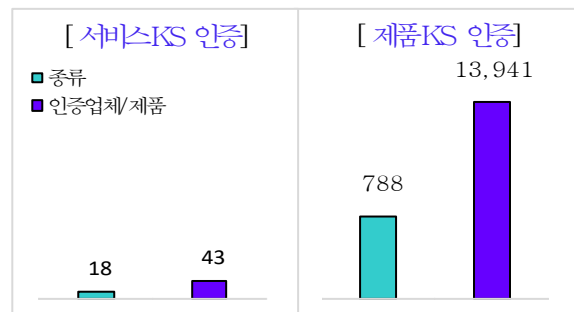
* 서비스 **제공절차, 품질평가분석 방법** 등의 표준모델 마련 → **품질개선 및 소비자 보호**
(예) 콜센터 서비스표준: 상담녹취, 불만 및 피해보상처리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

- 서비스의 특성(無形性·異質性) 상 표준화를 통해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가능
- 그러나, 표준·인증이 규제라는 인식과 함께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비용·교육 부담 등으로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수요 저조

KS 표준 현황('20년)



KS 인증 현황('21.9)



⇒ 표준개발 촉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 + 서비스 인증 인센티브 강화

3 서비스 통계 인프라

- 서비스산업 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작성중이며, 각 부처 및 산은·수은 등에서도 부문별 관련 통계 생산

* (통계청) 서비스업 조사(매년), 서비스업 동향조사(매월) 등 실시
(한국은행) 산업연관표(5년), 국민계정(분기 및 연간), 국제수지(서비스 수지) 등 제공

- 기존 통계들도 생산목적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제공 중이나, 제한적 정보제공으로 산업전반의 체계적 분석 등에 한계

▶ (상이한 분류체계) 기관별 분류체계 차이로 기관별 통계 연계 및 비교 곤란

* (예) 통계청: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, 한국은행: 국민계정체계 경제활동분류(KCEAN)

▶ (상위레벨 통계 제공) 대분류 또는 중분류 수준에서 통계 제공으로 서비스 세부업종별 현황과 구조변화 등의 미시적 분석에 한계

▶ (제조업 중심 통계)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업종세분화, 표본 수 등에서 통계조사 기반 취약

- 또한, 기술발전에 따른 **新비즈니스 모델** 등장,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사회·경제구조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보완도 필요

⇒ 서비스 통계 플랫폼 구축 + 산업구조 변화 반영을 위한 조사방식 개선

IV. 추진전략

- ◇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의 기반이 되는 ①서비스 R&D, ②서비스 표준·인증체계, ③서비스 통계의 3대 분야 고도화와 함께
- 여전히 서비스 생산·제공의 핵심인 '사람'의 역량제고를 위한 '서비스 핵심인력 양성'을 포함한 3+1 분야 핵심과제 추진

비전

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해 고부가 서비스경제로 진화

목표

서비스 생산성 획기적 향상
: '25년 8만불, '30년 10만불 수준 달성

3대 분야 고도화로 튼튼한 기반 구축

① R&D 활성화

- 정부 서비스 R&D투자 규모 확대 및 전략투자
- 민간 투자유도를 위한 서비스 R&D 인센티브 확대
- 서비스 R&D기반 확충

② 표준화인증체계 마련

- 핵심 서비스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추진
-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
- 서비스 표준 연계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

③ 통계 고도화

-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및 활용
- 新유형 서비스 반영을 위한 통계조사 개선
- 서비스 무역통계 작성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

[+1] 핵심인력 양성을 통한 서비스 전반의 생산성 제고

- 서비스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공고화
- 시장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필수인력 양성 확대
- 新시장·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대비한 혁신인재 양성
- 유망 서비스 분야 인력 육성

V. 분야별 세부과제

1

서비스 R&D 활성화

① 정부 서비스 R&D 투자 규모 확대 및 전략적 투자 실시

① 정부 R&D 재정투입 규모 지속 확대

- ('22년 재정투입 규모) 정부 서비스 R&D 투자를 전년대비 약 17.1% 확대('21년 1.50 → '22년 1.76조원)

* 전체 R&D 투자('22년 8.8% 확대) 대비 서비스 R&D 투자 증가 속도는 빠른 수준

- (중장기 재정투입 규모) 정부 서비스 R&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('21~'25년) 약 7조원 투자*

* 구체적인 투자규모는 재정운용여건,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【서비스 R&D 분류체계('16년)에 따른 예산 배분(억원)】

구분	'21 예산	'22 예산(안)	전년대비 증감	%
서비스 R&D 합계	15,025	17,591	2,566	17.1
① 융합新서비스창출	6,356	7,252	896	14.1
• 공공서비스혁신	1,666	1,826	160	9.6
• 신성장서비스	4,690	5,426	736	15.7
② 부가가치화	6,153	7,514	1,361	22.1
• 서비스 고도화	4,466	5,496	1,030	23.1
• 프로세스고도화	1,687	2,018	331	19.6
③ 공통기반	2,516	2,825	309	12.3
• 서비스 혁신기반	187	209	22	11.8
• 서비스 기반기술	2,329	2,616	287	12.3

②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R&D 투자 실시

- (스마트 물류)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·정보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·실증('21~'27년, 1,248억원) 및 수산물 유통·가공 기술 개발

- ▶ 공공·민간 물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('22년~, 132억원)
- ▶ 배송기사 추종형/자율주행형 말단 배송 로봇 개발('22년~, 86억원)
- ▶ 스마트 수산물 유통·가공 기술 개발('21년~, 363억원)
- ▶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('21년~, 24억원)

- (콘텐츠) 차세대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(메타버스 등), 실감 콘텐츠 등 핵심기술 개발 추진

- ▶ 他산업과 융합 촉진, 메타버스 활용 확대를 위한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('22년 259억원)
- ▶ VR·AR 등 첨단기술 활용, '비대면 문화예술 실감콘텐츠' 기술 개발('22년, 79억원)
- ▶ 메타버스 기반 공연('22년, 26억원) 및 지능형방송·OTT영상콘텐츠('22년, 8억원) 기술개발
- ▶ 인공지능(AI)기반 미디어 지능화 기술개발('22년, 69억원)

- **(관광·스포츠)**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의 일상화에 대응하여 데이터, IoT 솔루션 등 첨단기술 기반 새로운 서비스 개발 추진

- ▶ (관광) 디지털혁신 및 비대면·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R&D('22년, 44억원)
- ▶ (스포츠) 비대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스포츠 데이터 측정·분석 기술개발('22년, 137억원)
- ▶ (해양레저)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치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('22년 44억원)

- **(SW)** 금융·미디어·물류 등 미래 유망산업에 적용 가능한 ICT 기술 및 관련 서비스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

- ▶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('22년 신규, 39억원)
- ▶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('22년 신규, 48억원)

- **(의료)** 첨단 의료기술 개발 및 환자중심의 의료 기술 최적화

- ▶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AI 정밀의료 솔루션(닥터앤서 2.0) 개발('22년, 99억원)
- ▶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 핵심기술개발('22년 신규, 72억원)
- ▶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('22년 신규, 70억원)
- ▶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플랫폼 기술개발('22년, 40억원)
- ▶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('22년, 93억원) 및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('22년, 75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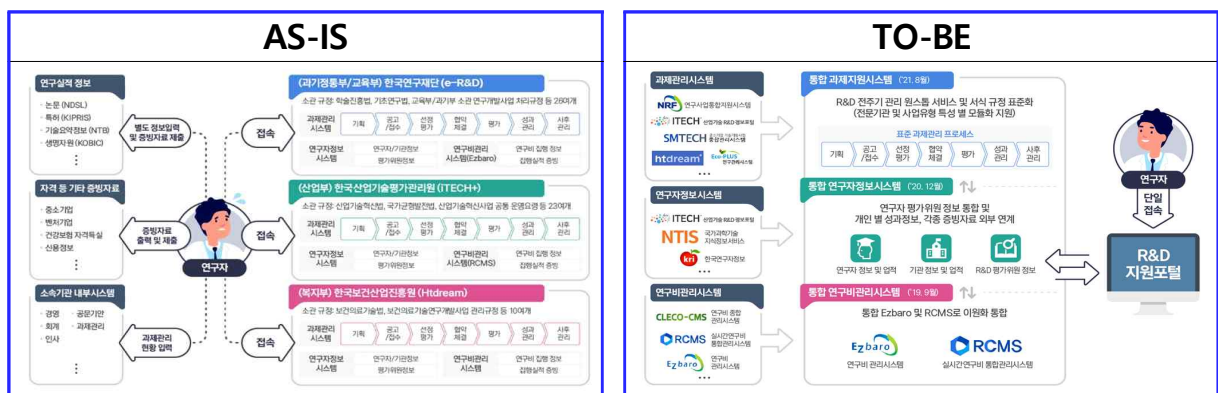
- **(교육)**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, 대학 연구환경 개선으로 기술개발 활성화 여건 조성

- ▶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('22년, 35억원)
- ▶ 핵심연구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의 연구 인프라 집적 및 공동연구 지원('22년, 380억원)

③ 정부 R&D 투자의 효율성 강화

- 중복투자 방지 및 R&D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) 구축(~'21) 및 적용('22~)

- * **(기존)** 부처별·과제별 R&D 관리(과제지원·연구비관리·연구자정보 시스템 각 20개 내외)
→ **(개선)** 각 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+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·간소화



- 문화기술분야 R&D예산을 기획·평가·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'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'(콘텐츠진흥원 부설)설립('21.11월)

참고

【서비스 R&D 주요 사례】

AI 정밀의료 솔루션 개발(닥터앤서 1.0 및 2.0) 및 확산

□ 닥터앤서 사업 주요내용

- AI 의료 SW 개발·실증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, 의료비 절감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신시장 창출에 기여

구분	닥터앤서 1.0(3차병원 중심)	닥터앤서 2.0(1·2·3차병원)
기간/규모	3년('18~'20년) / 364억원	4년('21~'24년) / '21년 50억원, '22년 99억원
참여기관	컨소시엄(의료기관 26개 + ICT기업 22개)	컨소시엄(의료기관 30개 + IC기업 18개)
대상질환	심뇌혈관, 심장질환 등 8개 질환 (21개 SW) *①심뇌혈관질환, ②심장질환, ③유방암, ④대장암, ⑤전립선암, ⑥치매, ⑦뇌전증, ⑧소아희귀질환	폐암, 간질환 등 12개 질환 (24개 SW) * ①간질환, ②폐렴, ③피부질환, ④우울증, ⑤치력전증, ⑥당뇨, ⑦고혈압, ⑧뇌경색, ⑨폐암, ⑩간암, ⑪위암, ⑫갑상선암

□ 닥터앤서1.0 주요성과

- (임상성과) 국내 38개 의료기관의 임상검증 과정에서 '진단정확도 개선', '진단시간 단축' 등의 획기적인 의학적 임상성과 확인
 - (의료현장 보급) 국내 65개 의료기관에서 활용 중이며, 소아 희귀질환SW는 캐나다, 멕시코 등 8개국의 의료현장에서 활용 중
- * 사우디 교차검증('20.7월~'21.4월) 성공으로 국산 AI의료SW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

< 주요 임상검증 성과 사례 >



□ 닥터앤서클리닉('22~'25년)

- 닥터앤서 등 국산 AI의료SW에 대한 국민 체감성과 확산을 위해 전국 8개 광역시도의 3차 의료기관(건강검진센터)에 보급·확산 지원
- * 다양한 사례축적 및 비용효과성 분석을 통해 국산AI의료SW의 신시장 주도기반 마련

2 민간 서비스 R&D 인센티브 확대

1 민간 R&D 세제지원 강화

-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포함('21.3 조특칙 개정)
- 실감형·문화 콘텐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·원천 기술 R&D 세액공제* 일몰 3년 연장('21년 → '24년)

* (대상기술) AR·VR·4D·홀로그램 콘텐츠 제작기술, 게임·영화·방송·애니메이션·웹툰 제작기술

-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추가 (근거법령상 정의규정 마련 후 반영)하고, 국외발생 제작비용도 포함

* (現) TV프로그램, 영화 등 영상 콘텐츠 → (改) OTT 추가

2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R&D 여건 개선

- 콘텐츠·핀테크 등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 확대('21년 4,500억원→'22년 5,500억원, 산은·기은)

- 성장 잠재력 높은 서비스(관광, 보건 등) 기업의 육성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('21년 8,000억원→'22년 8,500억원, 신보) 및 우대조치*

* 보증한도, 보증비율(90%), 보증료율(0.1~0.3%) 우대

- 문화콘텐츠산업보증, R&D·지식재산(IP)평가 보증 등을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지속('22년 8,000억원, 기보)

3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·디지털화 지원

- 여행·유통·외식업 등 소상공인과 창작자, 스타트업, 기술(플랫폼) 등 혁신 주체와의 융합·협력을 통한 성공 모델 창출('22년, 29억원)

【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지원 체계(안)】

【1】소상공인 + 창작자	【2】소상공인 + 스타트업	【3】소상인 + 소공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획·판로 등에 스타트업의 속도·편의·효율성 부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업종 간의 결합과 협업을 유도하여 상호 간 시너지 창출

- 중소기업의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·고도화 및 신사업을 창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 솔루션 개발 지원('22년, 30개 과제)

* (예) 챗봇 도입을 위한 자연어 처리 기술, 업무 자동화를 위한 기계학습, 재택근무·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솔루션 등

③ 서비스 R&D 기반 확충

① 서비스 연구개발(R&D) 가이드라인* 보완 추진

- * 서비스 연구개발의 정의 및 체크리스트 제시하고, 3가지 유형(새로운 서비스 개발,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, 제품-서비스 융합)에 따라 사례 소개('21.3월 배포)
- 서비스 R&D 수행 기업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(~'21.12월)를 토대로 대표 사례 등 수정·보완

② R&D 성과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

- 저작권 침해 발생에서 대응조치까지 단계별 업무과정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통합·관리하는 종합대응시스템 구축('22년 신규, 43억원)
- 차세대 실감 콘텐츠¹⁾ 및 SW²⁾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('22년 신규, 60억원)
 - 1) XR콘텐츠 저작권 보호·관리·유통 기술 개발(5건, 50억원)
 - 2) SW 저작권의 보호·계약유통을 지원하는 개방형 SW 저작권 플랫폼 기술 개발(1건, 10억원)
- 영세 서비스업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특허·상표·디자인 출원 지원 등 지식재산 권리화 및 인식 제고 추진('22년 신규, 19억원)
- R&D 성과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지원('22년, 6억원)
- 지식재산(IP)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방향, 분쟁대응 전략 수립 등을 제공하는 IP서비스기업의 BM 개발 및 사업화 지원('22년 24억원)

③ R&D 개발·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산업 육성 및 바우처 공급

-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해 R&D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서비스업*의 신고 요건 완화('21.10월)
- * 연구개발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연구개발을 직접 혹은 위탁 수행(주문연구업)하거나 연구개발 기획·관리 및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활동을 지원(연구관리업)

【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(「연구산업진흥법」 시행령)】

- ▶ (공통)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: 50% → 30%,
- ▶ (주문연구업) 전문인력 수: 5명 → 3명,
- ▶ (주문연구업) 연구공간: 독립된 공간 → 다른 공간과 분리된 전용공간

- 중소기업의 융합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·연구기관을 통해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공급*

* ICT R&D 혁신 바우처 지원('22년, 543억원)

1 핵심 서비스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추진

① 100대 서비스 표준 개발 로드맵 마련

- 「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(‘21.4)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00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단계별 표준 개발 로드맵 수립

【서비스 표준화 로드맵(안)】

연도	우선추진 분야	주요 표준화 항목
1단계(‘21~’22)	물류, 건강, 교육 등 코로나19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(물류·유통) 신선물류 정온포장 ■(보건·의료)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■(교육) 학습데이터, 학습분석
2단계(‘21~’23)	관광/컨벤션, 여가, 약자배려 등 포스트 코로나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(전시·관광) 컨벤션, MICE, 메타버스 등 ■(웰니스) 해수욕장 운영, 다이빙 등 ■(어린이) 돌봄 서비스 안전관리 등
3단계(‘23~’25)	신기술·융합서비스 등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(서비스로봇) 로봇 서비스지원 플랫폼, 데이터 수집방법 및 처리절차 등 ■(기후변화) 온실가스 원격검증 등

②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

-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비대면 경제, K-방역모델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

* 절차: 신규제안(NP)→작업초안(WD)→위원회안(CD)→국제표준안(DIS)→ 최종국제표준안(FDIS)→국제표준(IS)

【국제표준화 사례】

 <p>ISO 22981 신선물류 정온수송 포장방법 (드라이아이스 취급, 부피 및 온도 유지 측정)</p> <p>신선물류의 정온 수송 포장방법</p>	 <p>ISO 23842 VR콘텐츠 휴먼팩터 가이드 (기기발열 및 심신 건강상태 확인 경고 메시지)</p> <p>가상현실(VR) 콘텐츠용 휴먼팩터 가이드라인</p>
--	---

③ 新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데이터 표준화

- 데이터 결합을 통한 신제품·서비스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서비스 분야 기반데이터 표준화 추진

* (예)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도로신호교통상태 인프라 간 데이터 표준화

②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

① KS 서비스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

-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인증 취득 및 서비스 표준화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, KS 서비스 인증 개선안 마련

② 인증 부담 완화 및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

- KS에 따른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 구축 부담* 완화를 위해 환경, 보안 등 인증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내표준 작성 가이드 제작·배포

* 사내표준 제작을 위한 컨설팅 의뢰 시 5백만원 이상의 비용 소요

- 서비스 분야 정부포상 확대 및 KS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 적용

* (예) 국가품질경영대회, 세계표준의날, 한국서비스대상 등 평가 시 우대

-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인증제를 도입하고,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* 부여

* 중기부 R&D 참여 시 가점, 정책자금 및 보증, 인력 상 혜택 등

③ 분야별 특화 인증제도 활성화

-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공급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식점, 숙박·관광 등 생활밀착 분야의 인증 활성화

▶ (관광) 관광객의 편의 제고,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요 관광시설 및 서비스 대상으로 '한국관광 품질인증' 운영

* 숙박(일반·생활)업, 한옥체험업,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,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대상

▶ (해양치유) 태동기에 있는 해양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고, 시설·장비 인증기준·절차 마련('25년)

▶ (배달·퀵서비스) 종사자 보호, 소비자 보호, 사업 안정성·지속가능성 등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,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우수사업자 인증제 시행('22년)

▶ (음식점) 식중독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,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'음식점 위생등급' 취득 지원 및 위생등급 지정 확대

*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등 대상, 취득점수에 따라 매우우수/우수/좋은 등급 지정

④ 민간의 자생적 표준화 확산을 위한 단체표준·인증 지원

- 단체표준 관련 분쟁조정, 인증제품의 신뢰성 확보, 표준 서식 점검·개선 등 단체표준 활성화 지원
- 공식적 국가표준 외에 민간 중심의 사실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해 D.N.A. 및 ICT 융합서비스 관련 표준화 포럼 운영 지원

③ 서비스 표준 연계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

① R&D-표준-사업화 연계 강화

- (과제기획) R&D 개발시 표준 활용을 확대하고, 표준화가 필요한 R&D 조기 발굴을 위해 표준 선행조사·전략수립 추진
- (성과관리) 전담기관을 지정*하여 R&D 수행에 따른 표준 성과의 수집 및 유효성 검증 등 표준성과 관리 추진

* 표준 성과관리 전담기관: 한국표준협회, 한국표준과학연구원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
【국가 R&D와 표준연계 관련 법령 제·개정 현황】

- ▶ 「연구성과평가법」 개정('20.12) → 표준을 국가 R&D의 성과물로 인정
- ▶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정·시행('21.1) → 표준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가능

② 범부처 국가표준체계 중심의 부처 협력 활성화

- 표준화 우선 추진 분야 선정,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 부처 협력 확대를 위해 서비스 표준 코디네이터 운영

③ 국제교류 강화

- 국제표준 제안과 국제표준 도입 확대를 위하여 ISO, ITU* 등 국제표준화기구 및 사실상표준화기구와의 협력 강화

* ISO(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: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개발·보급
ITU(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): 유무선통신, 전파, 방송 분야 국제표준 기구

①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및 활용

① 서비스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통계플랫폼 구축



- 서비스산업 전반의 통계를 수집·가공 후 제공하여 산업지형 진단, 효율적 산업분석, 정책지원이 가능한 통합 통계플랫폼 구축 추진

*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개발을 위한 ISP 既 실시('21) → '서비스업 통계 비교분석 및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('21)'를 바탕으로 통합 통계 플랫폼 구축 추진(산업연구원)

- 단기적으로는 기존 서비스통계의 재구성과 표준화*를 추진하되,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통계조사를 통해 맞춤형 통계도 생산

* ①서비스산업 데이터를 생산하는 국내외 모든 기관협화·기업 등의 데이터를 수집→
②수집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기관별·시계열별 상이한 산업분류코드 자동연계

【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의 기능 및 역할(案)】

① 서비스산업 지형 진단자료 제공

- ☞ (산업범위) 한국산업분류 기준 소분류에 해당하는 110여개 서비스업종의 통계 수집·제공
- ☞ (통계범위) 데이터 유형을 확대를 통해 신규 데이터를 제공하여 변화된 산업환경 파악 가능

②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 제고

- ☞ 산업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기본적 통계 수집 후 표준화, 가공·처리 후 제공
- ☞ 서비스 통계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여 기관별로 상이한 서비스 통계자료 간 연계성 확보
(예)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와 경제활동분류(KCEAN)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

③ 제도 및 정책 지원

- ☞ 서비스산업 전반의 통계를 활용한 정책 및 전략 효율성 제고 가능
(예) 서발법 상 중점육성 또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선정 근거로 활용

② 서비스업 통계 플랫폼 활용

- 혁신역량, 기업경영 성과, 국제화 및 대외거래 등의 변화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주요 업종별 글로벌 경쟁력 평가 모델 개발
- 경쟁력 평가를 기반으로, 서비스 업종별·글로벌 시장별 변화의 방향성을 조망할 수 있는 경쟁력 지도 작성 및 제공

【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을 통한 기대효과】

① 서비스산업 통계관리 효율화		② 비용 절감 효과	
서비스산업통계 플랫폼 구축	⇒ 기존 서비스통계 취합 및 관리환경 마련	서비스산업 연구 공통프로세스 지원	⇒ 사회적 비용 절감
서비스산업분류코드 표준 정립	⇒ 기관별 상이한 산업분류코드 연계	클라우드 인프라 + 서비스 지향 시스템	⇒ 시스템 운영비용 절감
③ 정책 및 전략 효율성 제고		④ 서발법 및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	
전체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통계정보 확보	⇒ 거시적 측면 파악	서비스산업 경쟁력평가 지원	⇒ 서비스산업 발전
소분류 수준의 상세파악 정보 제공	⇒ 미시적 측면 파악	정책 수립 · 수행에 객관적 데이터 제공	

② 新유형 서비스 반영을 위한 서비스업 통계조사 개선

① 서비스업 통계조사 대상 확대

-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경제 증가에 따른 새로운 경제행태를 서비스업 조사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모집단 변경*
- * (現) 전국사업체조사(오프라인매장 중심) → (改) 기업통계등록부(사업자등록 기반)
- 모집단 포괄범위 확대에 따른 서비스업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업 조사 표본규모 확대

구 분	서비스업 조사		'20년 타조사 비교	
	'20년	'22년	소상공인	프랜차이즈
모집단(개)	298만	450만(+152만)	243만	20만
표본규모(개)	20만	25만(+5만)	4만	2.5만
목표오차(%)	9.9~15.3%	9.8~15.7%	7.0%	2.42%

② 서비스업 조사항목 재설계

- 서비스산업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他경제조사와의 정합성 제고를 통한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항목 재설계

* 조사항목 재설계(안) 수립(~'22.2) 및 시험조사 실시('22.6) 후 현장조사 적용('23)

【조사항목 재설계(案)】

구분	사유	조사항목	해당 업종
신설	비대면 서비스업 현황 파악	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	도매 및 소매업, 숙박업, 음식점 및 주점업, 정보통신업
		무인 결제기기 도입 여부	도매 및 소매업(소매), 숙박업, 음식점 및 주점업
		배달(택배) 판매 여부	도매 및 소매업(소매), 음식점 및 주점업
폐지	항목 정합성·활용성 ·신뢰성 낮음	전산장비 보유대수	정보통신업
		무형자산 보유건수	
		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	전문·과학·기술 서비스업
		세분업종별 매출액 구성비	
변경	항목 기준 일치 (경제총조사, 서비스업동향조사)	전자상거래(매출) 여부	공통(도매 및 소매업 제외)
		☞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	
		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(‘인터넷’ 판매☞‘온라인’ 판매)	도매 및 소매업

③ 최근의 경제구조를 반영한 산업별 생산지수 작성

- 시의성 높은 통계를 위해 ‘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를 반영, 서비스업 생산지수 작성 시 포함되는 대표업종 변경 추진

-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해 전년 가중치를 반영하는 연쇄작성방식 도입

* (現) 가중치 산정 시 기준연도(5년 단위) 부가가치 사용 → (改) 전년도 부가가치 사용

③ 서비스 무역통계 작성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

① 서비스 분야별·국가별 무역통계 작성

- 외환거래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분야별·국가별 무역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「대외무역법」 개정 추진

* 「외국환거래법」 제22조 등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

** ('22.上) 연구용역 추진 및 개정안 마련 → ('22.下) 국회 통과 및 시행

- 서비스 무역통계 구성항목 사전검토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(기재부·산업부·무역협회 등 참여)

②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실시 추진

- 서비스의 교역 증가*에 따라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추진

* 글로벌 서비스 교역 비중(WTO): ('00년) 18.6% → ('19년) 24.1%

① 서비스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공고화

① 新서비스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유연화

- 첨단분야(혁신신약, AR·VR, 핀테크 등)의 대학원 증원 확대 등을 허용¹⁾ 하고, 석사 정원과 박사 정원 간 상호교류도 확대²⁾

1) 결손인원 → 신입생 정원 전환, 교원확보를 90% 충족 시 정원 순증 허용

2) (現) 석·박사 간 정원조정 불가 → (改) 석사 1.5명 : 박사 1명 전환 가능

- 첨단분야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하여 학·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인 (가칭)점프(JUMP:Joint University Master Program) 신설 추진

* (예) SW중심대학·AI대학원 등을 연계하는 SW·AI 학사-석사 통합과정 등

- SW 등 인력수요가 크거나 재직자 학습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원격대학 內 일반·전문대학원 설치 추진

* (現) 특수대학원만 가능 → (改) 일반·전문 대학원 허용(의치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외)

② 서비스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접근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

- 서비스 인재양성 포함, 부처별 인재양성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·사업수혜자별로 분류하여 정보 제공

* (現) 인재양성 사업별 개별 공고 → (改) 인재양성 사업 취합분류 + 사업 공고 전 안내

- 대학 특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현황, 사업별 추진기관, 성과 등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부처 간 정보교류 확대

* '사람투자·인재양성협의회' 확대: 민·관협의체 외에 정부부처 실무협의체 신설

- 대학 재정투입·성과분석 등이 가능한 대학 산학협력력 정보화 시스템 도입하여 서비스 인재양성 성과관리 체계 구축

* 사업 수혜인원, 교육과정 운영실적, 취업률 및 고용현황 등 성과관리

③ 서비스 표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·운영

- 중·고등학생 대상 표준 교육¹⁾, 직업계고 기초교육²⁾ 등을 통해 서비스 표준 분야 미래인재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

1)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

2) 연간 50명 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분야 기초교육 실시

- 기술표준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표준인재 양성 및 취업연계·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산학연계 프로젝트 활성화

② 시장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필수인력 양성 확대

① 서비스산업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(LINC 3.0)

*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: Leaders in Industry-university Cooperation)

-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추진 역량을 고려한 산학연협력 단계적 성장모형을 제시하여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('22년, 4,070억원)

구 분	성장모형	중점 추진전략
일반 대학	①협력기반 구축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인재양성)산학연계 교육 확대, 산업중심 교육과정 재구조화 ■ (인프라)산학협력 친화형 평가 확대, 산학협력 추진조직 정비
	②수요맞춤 성장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인재양성)산학연계교육의 취·창업 연계성 제고 등 ■ (기술혁신)대학별 강점분야 산학연협력 브랜드화 등
	③기술혁신 선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인재양성)대학원 산학연협력, 비대면·글로벌 모델 개발 ■ (기술혁신)중장기 산학공동기술개발, 기술지주회사 활성화
전문 대학	①협력기반 구축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산학연계교육 도입 및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■ 산학협력 친화형 평가 확대, 산학협력 추진조직 정비
	②수요맞춤 성장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회맞춤형학과 및 재직자교육 활성화 ■ 실용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

②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

- 바이오헬스, 실감미디어를 포함한 신기술 분야*의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을 운영하여 신산업 분야 인재 중점 육성('22년, 890억원)

* ('21년) 바이오헬스, 실감미디어, 지능형 로봇, AI, 빅데이터, 미래차 등 지정

- 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SW교육 혁신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시장수요가 급증한 SW분야 전문인력양성

▶ (SW중심대학)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SW전공교육 강화('22년, 765억원)

* 일반트랙(최대 8년) 및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특화트랙(최대 6년) 운영

▶ (캠퍼스SW아카데미) 기업이 대학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('22년, 31억원)

▶ (NW형 캠퍼스SW아카데미)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실전형 교육('22년, 46억원)

▶ (기업 멤버십 SW 캠프) 기업수요가 높은 중·고급 인재 양성('22년, 124억원)

- 디지털 선도기업 등의 혁신적 훈련방식을 접목한 K-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핵심 실무인재 양성('22년, 3,298억원)

③ 서비스산업 인력 수요 파악을 위한 정기 수요전망 실시

- 서비스산업에 대한 미래 노동시장 수급을 예측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기 위해 '중장기 인력수요전망' 실시

③ 新시장 ·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대비한 혁신인재 양성 등

① 신직업 활성화 방안 마련

-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신직업을 발굴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

* '21.12월(잠정), '신직업 활성화 방안' 발표 예정

② 시장선도를 위한 혁신인재 양성

-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'범부처 혁신인재 양성사업' 신설('22년 신규, 600억원)
- 전문대학에 신산업 관련 교육과정 신설,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특화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('22년, 120억원)
- 청년, 석·박사, 재직자 등 대상별 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현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('22년, 84억원)
- 의약품, 기능성 식품 등의 규제를 이해하고, 안전성·유효성 평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육성 확대('22년, 50억원)

* 5년간('21~'25) 석·박사 전문인력 600명 양성, 의료기기 분야 등 확대(5→8개 대학) 추진

③ 신한류를 견인할 융합형 문화인재 양성

- 현장전문가-(예비)창작자 간 도제식 교육을 통해 청년인재의 창작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까지 지원('22년, 108억원)
- 대학·대학원에서 AI·XR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및 교육 과정 운영(원캠퍼스)을 통해 신기술 활용능력 제고('22년, 41억원)
- 예술-과학 융합인력, 석박사급 문화기술 핵심인력, 게임분야 첨단기술 인력 등 융복합 고급인재 양성('22년, 83억원)
- 문화기술개발자, 콘텐츠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기술 기반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융복합 창작자 양성('22년, 16억원)
- 실감 콘텐츠 및 인공지능 연계 현장 실무 인재 양성('22년, 70억원)
- 개인의 창의성과 미디어 역량이 융합된 1인 미디어 창작그룹 발굴·육성 및 해외진출 등 전주기적 지원('22년, 34억원)

4 유망 서비스 분야 인력 육성

① 시장 선점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바이오·콘텐츠, 관광 등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의 인력 육성을 중점 지원

▪ (바이오) 바이오·메디컬 혁신인재 및 신진의사과학자 등 보건의료 분야 특화 인재 및 해양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

- ▶ (의과학자) 융합형 의사과학자 연간 85명 양성('19~), K-Medi 융합인재 75명('22~)
- ▶ (특성화대학원) 제약,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각 3개소 운영, 연 30억 원 지원
- ▶ (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)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도입('21~'25년간 약 5천명)
- ▶ (해양바이오) 재직자 대상 실무교육을 통해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('22년, 2.5억원)

▪ (콘텐츠) 영화·게임·웹툰 등 핵심 장르별 인력양성을 강화, 문화콘텐츠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

- ▶ (영화) 촬영연출 등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지원(영화아카데미, '22년 85억원)
- ▶ (게임) 신기술기반 게임제작 역량을 갖춘 현장형 실무 인력 양성(게임인재원, '22년 40억원)
- ▶ (웹툰) 웹툰작가 입주 및 교육공간이 융합된 집적시설 조성(웹툰융합센터, '22년 준공)
- ▶ (OTT) 미디어종사자 등 대상 'OTT 융합방송 인력양성 교육' 확대('22년 20개 과정)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'OTT-콘텐츠 특성화 대학원' 신규 지원('22년, 10억원)
- ▶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고급 번역인력('22년 13.6억원)과 수출 전문인력 양성('22년, 20억원)

▪ (관광·스포츠) 미래관광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관광인재 발굴, 스포츠산업의 첨단화·고부가치화를 위한 우수인력 양성

- ▶ 관광-ICT 융합인재 등 인재발굴 및 업종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('22년, 34억원)
- ▶ 스포츠 융·복합대학원 운영, 실무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('22년, 36억원)
- ▶ 해양관광 신산업 분야별(마리나선박, 크루즈, 해양치유) 전문인력 양성('22년, 10억원)

▪ (물류) 비대면·온라인 중심의 新 비즈니스모델에 능숙하고,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역량을 갖춘 물류전문인력 양성

- ▶ 물류전문인력양성 및 물류관리사자격제도 운영('22년, 7억원)
- ▶ 스마트 해상물류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자격제도 도입('22년, 10억원)
- ▶ 스마트항만 장비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('22년, 3.2억)

VI. 향후 추진계획

정책 과제	추진시기	소관부처
【서비스 R&D 활성화】		
▪ 정부 R&D 재정 투입 규모 지속 확대	'22~	기재·과기 등
▪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R&D 투자	'22	과기·국토·문체·해수 등
▪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) 구축	'21.下	과기·정통부
▪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설립	'21.下	문체부
▪ 민간 R&D 세제지원 강화	'22	기재부
▪ 서비스산업 금융지원 확대	'22	금융위·중기부
▪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·디지털화 지원	'22	중기부
▪ 서비스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보완	'22~	기재부·과기·정통부
▪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R&D 성과보호 강화	'22	문체부·특허청
▪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	'21.下	과기·정통부
▪ R&D 바우처 공급	'22	과기·정통부
【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체계 마련 촉진】		
▪ 100대 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	'22	국표원 등
▪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	'21~	국표원 등
▪ 유망서비스 분야 기반데이터 표준화	'22	국표원 등
▪ KS 서비스 인증 실태조사 실시	'22	국표원
▪ 인증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	'22	국표원·중기부
▪ 분야별 특화 인증제도 활성화	'22~	문체·국토·해수 등
▪ 민간 부문 표준화 확산을 위한 단체표준 지원	'22	국표원·과기부 등
▪ R&D-표준-사업화 연계 강화	'22	국표원
▪ 표준화 관련 부처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	'22	국표원·과기부 등

정책 과제	추진시기	소관부처
【서비스 통계시스템 고도화】		
▪ 서비스산업 통합 통계플랫폼 구축 및 활용	'23	산업연구원
▪ 서비스업 통계조사 대상 확대	'22	통계청
▪ 서비스업 조사항목 재설계	'22~	통계청
▪ 서비스 생산지수 작성방식 개선	'22~	통계청
▪ 서비스 무역통계 작성	'22	산업부
▪ 서비스 해외진출 실태조사 추진	~'23	산업부
【서비스 핵심인력 양성】		
▪ 대학교육 유연화	'22~	교육부
▪ 인재양성 사업 접근성 및 정책 효율성 제고	'22~	교육부
▪ 서비스 표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·운영	'22	국표원
▪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	'22~	교육부
▪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	'22	교육부
▪ SW분야 전문인력 양성	'22	과기정통부
▪ K-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실무인재 양성	'21~	고용부
▪ 서비스산업 수요전망	'22	고용부
▪ 신직업 활성화 방안 마련	'22	기재부
▪ 범부처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설	'22	교육부
▪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	'22	과기정통부
▪ 규제과학 전문인력 육성 확대	'22	식약처
▪ 융합형 문화인재 양성	'22	문체부·과기부
▪ 유망 서비스 분야 인력 육성	'22	복지문체국토해수 등